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와 대응방안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적 측면의 정책목표, 양질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정책, 그리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제도의 정비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도출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경제가 성장에 그치지 않고 건실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배측면의 경제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분배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이 가계의 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 구조가 건실해야 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경제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건실한 소득계층구조는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가경제가성장에그치지않고건실한구조로지속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분배측면의경제정책도동시에추진되어야만한다.
분배정책의지표가되는것이가계의소득계층구조이다.
소득계층의구조가건실해야만이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요로인해경제가안정적인구조를가질수있다.
건실한소득계층구조는두터운중산층의형성으로표현되기도한다.
두터운중산층의형성은모든국가의정책목표일것이다.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은 모든 국가의 정책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90년대 중반까지 경제 · 사회전반에 걸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빈곤 · 서민계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극빈층 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이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쉽게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빈곤 차상위 계층의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을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적부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세 · 교육 · 보건의료 · 사회보험 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산 · 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 · 서민층의 소득은 하향한데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은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포럼』의 본 호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건전한 소득계층 구조형성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